

‘4.27 판문점선언’ 제2조 이행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향

이 용 민 연구위원

2018. 5.

‘4.27 판문점선언’ 제2조 이행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향

이용민 연구위원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	요 약	1
I	서 론	3
II	역대정부의 합의	7
III	핵심쟁점 검토	15
	1. 비무장지대(DMZ)의 무장화	
	2.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정당성	
	3. 군사회담의 실효성	
IV	군사적 신뢰구축 방향	26
	1. DMZ의 평화지대화 (제1항)	
	2. 서해 NLL의 평화수역화 (제2항)	
	3. 군사회담의 체계화 (제3항)	
V	결론 및 정책제언	36
■	참고문헌	37

표목차

〈표 1〉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제2조 전문	3
〈표 2〉 군사적 신뢰구축(MCB)의 범주	6
〈표 3〉 ‘7.4 남북공동성명’의 주요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안	7
〈표 4〉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안	8
〈표 5〉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의 주요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안	9
〈표 6〉 ‘제1차 국방장관회담’의 주요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안	11
〈표 7〉 ‘10.4 남북정상선언’의 주요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안	12
〈표 8〉 ‘제2차 국방장관회담’의 주요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안	13
〈표 9〉 역대정부의 2000년 이후 남북 군사회담 개최 내역	14
〈표 10〉 2000년 이후 남북 군사회담을 통한 합의서 도출 내역	24

그림목차

[그림 1] ‘10.4 남북정상선언’ 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안안	23
---------------------------------------	----



1. 연구목적

- 2018.4.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선언’ 제2조의 실제적 이행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의 세부방향 제안

2. 군사적 신뢰구축의 개념

- ‘군사적 신뢰구축(Military Confidence Building)’은 국가간 군사력을 사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상호 규제·약화·제거하는 것

3. 역대정부의 합의

- 우리 정부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핵심노력은 과거 남북간 총 7회의 합의로 귀결되며, 이는 정치적 긴장완화 및 통일기반 구축에 중점
- 이러한 합의안들은 ‘잃어버린 11년’간 이행되지 못하고 무산됐는데, 이는 극도로 악화된 남북관계 및 법제화 등 실질적 추진동력 한계에 기인

4. 핵심쟁점 검토

- 비무장지대(DMZ)는 1953.7.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완충지대로서 유지돼야 하나, 1971년부터 약 50년간의 비무장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무장 상태로 우발적 무력충돌의 위험을 안고 있는 상태
-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정전협정’의 원칙에 기초해 1953.8.30일 확립된 해상 군사분계선(MDL)으로서, 우리 정부는 제2차 정상회담 및 국방장관회담을 필두로 인근에 대한 평화수역화를 추진했으나 무산된 상태
- 북한은 해군력을 증강한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NLL을 부인하고 있으나, 과거 북한이 사실상 NLL을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이를 활용한 전례 다수
- 남북 군사회담은 과거 다수 개최되며 다양한 합의점을 타결해왔으나 이행까지는 연결되지 못한 상태로, ‘판문점선언’을 통한 군사적 소통의 기회가 일시적·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법제적 담보 필요

5. 군사적 신뢰구축 방향

(1) DMZ의 평화지대화

- 포괄적 평화지대화 : 최전선에 포진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측의 비대칭적 군사요소를 제거해 우리의 안보이익을 더욱 증대시키는 행위로,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군사·非군사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충족
 - 군사적 평화지대화 : 인사교류, 직통전화, 점진적 중화기 및 GP 축소 등
 - 문화·환경적 평화지대화 : 생태계 공동활동, 평화공원화, 국제기구 유치 등
 - 경제적 평화지대화 : 남북 모두 경제실익을 얻는 현실적 사업부터 추진
- 단계적 평화지대화 : ‘광의의 운용적 군비통제’로서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단계에 맞춰 평화지대화 추진 및 체계적 검증 필수 동반
 - 기존의 이행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칭)DMZ 평화지대화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약화돼 있는 중감위·군정위 등의 역할을 보완하고 검증 체계화
 -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및 ‘평화협정’으로의 과정 속에서 선후조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그 단계에 따라 군사적 신뢰구축의 더욱 진전된 조치 추진

(2) 서해 NLL의 평화수역화

- 원칙 고수의 평화수역화 : NLL은 지상의 MDL과 같은 법적성격과 가치를 가진 해상경계로, 새로운 합의 시까지 확고히 준수한다는 입장 견지
- 점진적 확대의 평화수역화 : ‘10.4 선언’ 시 합의안 및 文정부 국정과제 안대로 추진하되, 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 상호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해역부터 ‘시범적 평화수역’으로 시작해 적용수역 확대

(3) 군사회담의 체계화

- 군사공동위, 분야별 분과위 등 군사회담 수시화 및 정례화 추진

6. 제 언

- 역대 합의의 진전, 정상회담과 같은 포괄적 타결, 비핵화·평화체제 단계와 연결된 신중한 선후조치라는 큰 틀에서 신뢰조치를 합의·실행할 것

▶ 주제어 :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군사회담

I 서론

□ 남북 양 정상은 ‘4.27 판문점 공동선언’의 제2조를 통해 군사긴장 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합의

- ‘판문점선언’은 총 3개조 13개항으로 구성, 본고는 이 중 “한반도상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천명한 제2조의 군사적 신뢰구축 명문화 내용에 초점
 - 제1조는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과 발전 이룩”, 제3조는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 협력” 규정
 - 제3조의 제1항과 2항은 “어떠한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상호불가침 합의 재확인·준수 및 군사긴장 해소와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 명시
 - 본고의 연구범위인 제2조는 그와 관련된 이행안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

〈표 1〉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제2조 전문

제2조.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1항.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2항.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

3항.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 제2조제1항의 ‘적대행위’에는 실제 전투·교전 행위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및 서해 북방한계선과 같은 분쟁유발 가능성 문제도 핵심사안으로 포함

- 제1항의 말미와 제2항은 이에 중점을 두고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
- 제3항의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및 5월 중 장성급회담 추진’은 상기 2개항의 실행을 위한 필연적 수단으로서 강조된 것
-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주권국가의 군사훈련’¹⁾은 적대행위에 미해당, 이는 한미 양국이 ‘방어’의 목적으로 수십년간 시행해 온 정규훈련으로 북한도 그와 동일한 훈련 진행²⁾
- 정부는 이미 제2조제1항에 명시된대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확성기 철거’를 5.4일자로 완료, ‘전단살포’도 전면 중단 추진중
 - 대북심리전 목적의 확성기 방송은 1963.5.1일 서해 휴전선 일대에서 최초 시작, 참여정부 당시 ‘6.15 공동선언(2000년)’의 후속조치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2004.6.15일 전격 중단
 - 천안함 폭침사건(2010.3.26) 직후 대북확성기 재설치, 비무장지대 북한군 목함지뢰 도발(2015.8.4) 발발로 11년 만에 방송 재개 후 최근까지 지속
 - ※ 2015.8.25일 긴장완화를 위해 중단, 北 4차 핵실험(2016.1.6) 후 즉시 재개
 - 국방부는 남북정상회담 4일 전부터 방송 중단(4.23), 회담 4일 후부터 대북확성기 철거 시작(제2조제1항의 5.1일)
 - ※ 이동형 10여 대, 지상고정형 30여 대 등 총 40대 수준, 이동형은 최전방에서 후퇴시키고 고정형은 철거 추진
 - 북한군도 5.4일 이전 최전방지역 대남확성기 총 40여 대 철거 완료
 - ※ 北 대남확성기는 그간 군 총정치국 산하 적공국 지시에 따라 군단 적공부 및 사단 적공과가 운영하는 방송국을 통해 155마일 휴전선 전 지역 전개³⁾
 - 우리 군당국은 대북 선전방송인 FM라디오 ‘자유의 소리’(2004.6.15 중단, 2010.5.24 재개)도 송출 중단 검토중
 - 통일부는 대북 전단살포를 ‘판문점선언’ 합의 위반으로 규정, 민간단체들에 살포 중단을 지속 요청하고 경찰청과도 단속 공조 실행
 - 이러한 적대행위 중지의 초기 조치는 최근까지만 해도 심각했던 한반도상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

1) 2018.5.11~25일간 진행되는 한미연합 공중전투훈련 등

2) 중앙일보 오피니언, “남북관계는 더 나갔고, 비핵화는 덜 나가.. 양자 균형 중요” - 위성락 서울대 교수(前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와 박명림 연세대 교수 대담, 2018.4.30.

3)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한울아카데미, 2003.3.10.

□ ‘군사적 신뢰구축(MCB)’은 “국가간 안보·군사 문제에 있어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특별한 국가행위”⁴⁾로서 군사력 규모, 군구조, 무기체계 구성 등을 조정하는 ‘군축 및 구조적 군비통제’⁵⁾와 대별되는 개념

○ 본고는 광의의 관점에서 신뢰구축 행위를 정의한 CBM⁶⁾에서 ‘판문점선언’ 제2조와 관련된 좁은 범위의 안보·군사 정책상 신뢰조치에 초점

- 협의의 관점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은 국가 상호간 군사적 차원의 불신을 배양할 수 있는 3誤(오해, 오인, 오판)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들에 국한⁷⁾

○ 군사적 신뢰구축은 ‘구체적 실천’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

- 국가들간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훈련, 기동 등 군사행동을 통보·확인하게 되면 무력을 이용해 긴장과 충돌을 시도할 의도가 없음이 방증되기 때문
- 실천이 전제돼야만 군사적 불확실성을 명확히 감소시키고 군사행동으로 압력을 가하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해 상호국간 안심⁸⁾하는 분위기 조성

○ 이에 군사적 신뢰구축은 한 국가의 군사적 의도에 대해 상대국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는 행위이므로 ‘재보장(Reassurance)’ 정책으로서의 가치 보유

- 재보장론은 탈냉전 이후 90년대 초반 협력안보론자들에 의해 이론화⁹⁾
- 군사적 신뢰의 실천적 요소를 강조한 것, 국가들이 상호 군사적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관계로 나아갈 것을 주장한 데서 비롯

○ 일방적인 군사정보 수집으로 인해 상대국의 군사적 의도를 오인하는 불안정성 방지, 기습공격의 공포와 같은 잠재적 군사우려 제거

4)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 Y. Ben-Horin, R. Darilek, M. Jas, M. Lawrence and A. Platt, "Building Confidence and Security in Europe : Potential Role of Confidence and Security-Building Measures", RAND Corporation, 1986.

5) SAC : **S**tructural **A**rms **C**ontrol

6)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 신뢰구축 조치 / “광의의 관점에서 국가간 상호작용, 교류 및 합의를 통해 이해와 신뢰를 촉진시키는 정치적·경제적·군사적·기술적·문화적 측면의 모든 행위(James Macintosh, 1985)” 또는 “상호간 적대감정을 줄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증대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일(Gabriel Ben-Dor, 1994)”로 정의

7) 한용섭,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 이론, 선례, 정책대안”, 국가전략, 8(4), 2002.12.

8) J. J. Hoist and K. A. Melander, "European Security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Survival, 19(4), 1977.8.

9) J. E. Nolan, "Global Engagement : Cooperation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4.

- 결론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의 최종목적은 국가 상호간 군사력을 사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규제·약화·제거하는 것
 - 군사적 신뢰구축에 합의했음에도 상호국간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 상대국의 무력사용에 대해 의심을 계속 갖거나 한 국가가 군사적 의도를 실제 갖고 있다면 신뢰구축 체계는 불완전하게 유지되다 결국 무산될 것
 - 이에 상대국이 수용할 수 있는 ‘의도 없음’의 증거제시 및 검증행위 필수
 - ※ 조기경보, 군사적 민감지역에 군사력 배치·이동 제한, 무력사용 제약조치 등
 - 구조적 군비통제(SAC)와 달리 군사력의 운용(훈련, 기동, 가용성, 행위, 특정지역 배치 등)을 통제하는 조치로서 ‘운용적 군비통제’¹⁰⁾에 포함

〈표 2〉 군사적 신뢰구축(MCB)의 범주

구 분	광의의 군비통제			
		협의의 군비통제		
		광의의 운용적 군비통제		
		광의의 신뢰구축 (CBM)	협의의 운용적 군비통제	
	非군사분야	군사분야		
영 역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MCB)	운용적 군비통제 (OAC)	구조적 군비통제 (SAC)

자료 : R. Darilek and J. Setear, "Arms Control Constraints for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RAND Corporation, 1990. ; R. D. Blackwill and S. F. Larrabee, "Conventional Arms Control and East-West Security", Duke University Press, 1989.

□ 본 연구는 ‘판문점선언’ 제2조를 통해 합의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대한 구체적 협의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 이를 위해 역대 한국정부의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을 우선 살펴보고, ‘판문점선언’의 신뢰조치에 대한 핵심쟁점들을 검토한 후 쟁점별 방향성 제안
 - 각 항별 키이슈인 비무장지대, 서해 북방한계선 및 군사회담 쟁점에 초점
- ‘5월 중 개최’로 합의된 군사당국간 회담을 위한 대비자료로 활용 가능
 - 군사적 후속조치를 비롯해 모든 의제에 대한 명확하고 세밀한 준비 중요

10) OAC : Operational Arms Control

□ 우리 정부의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은 과거 남북간 총 7회의 합의로 귀결¹¹⁾,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및 통일기반 구축을 중점에 두고 추진

- (1. 7.4 남북공동성명) 1972.7.4일 이후라 당시 중앙정보부장 및 北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이 주체가 돼 분단 이후 최초로 발표한 한반도 통일 관련 성명으로 <표 3>과 같이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
 - 우리 정부는 70년대부터 능동적·단계적 통일정책 하에 북한에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선행적으로 제의¹²⁾
 - 공동성명 시 남북 정상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 천명¹³⁾

〈표 3〉 ‘7.4 남북공동성명’의 주요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안

상호 비방·중상 중단 (2항)	• 쌍방은 남북간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음
무장도발 중단 (2항)	•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음
우발적 충돌 방지 (2항)	•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함
직통전화 설치 (2항)	•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간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 평양과 서울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 설치

- 80년대 들어 우리 정부는 남북간 군비경쟁 지양을 주장하며 더욱 구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제안¹⁴⁾

11) 국방부,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주요 합의사항」, 2018.4.20. ; 김재홍,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방향”, 조선대학교 군사발전연구, 7(2), 2013.12. ; 장용운,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방안 모색 : 국제적 사례와 역사적 교훈을 중심으로”, 군사, 74, 2010.3.

12) 박정희 대통령의 1970년 8.15 경축사 : “긴장상태의 완화 없이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 1974년 8.15 경축사 : “남북간 상호 문호개방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남북대화 및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자”

13) (1)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 (2)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 (3)사상,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

14) 김재홍, “남북한간 군비통제 및 군축 제의 경과”, 한반도 군비통제, 38, 2005.12.

- 1982.2월 손재식 당시 국토통일원 장관은 대북성명 ‘민족화합을 위한 20 개항에 걸친 구체적 사업 제의’를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1)비무장 지대 내 군사시설 완전 철거 및 (2)쌍방 군사책임자간 직통전화 설치 제의
- 1986.6월 북한의 ‘3자 군사당국자 회담’ 제의에 이기백 당시 국방장관은 대북서한을 보내 선전적인 군사회담보다 기존 군사정전위 내 회의를 통해 (1)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 (2)주요 군사훈련 상호통보 및 참관초청 등을 시행할 것 제의
 - ※ 이후 북한도 1986.12월 김일성 주석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제의하며 (1)상호 비방·중상 중지, (2)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을 의제로 제시, 이를 통해 1987.1월 공식회담을 거듭 제의
- 1988.2월 출범한 노태우정부는 1990.9월부터 ‘남북고위급회담’¹⁵⁾을 통해 전향적 대북 군비통제 정책 전개 시작¹⁶⁾
 - 1989년 냉전종식 전·후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연쇄적 몰락, 독일의 통일 (1990.10.3), 소비에트 연방 해체 등 안보정세의 급격한 유동현상 발생
 - 이에 외교적 고립은 물론 소련의 대북지원 중단에 따라 체제붕괴 위기에 봉착한 북한은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에 응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상황¹⁷⁾
 - 총 8회에 걸친 회담을 통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해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실현 문제를 협의·추진한다”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후 부속합의서들도 1992.9월까지 연이어 도출
 - (2. 남북기본합의서) 1991.12.13일 정원식 당시 국무총리 및 北 연형묵 정무원총리가 제5차 회담 시 채택, <표 4>와 같이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

〈표 4〉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안

남북군사 공동위원회 (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내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	---

- 15) 제6공화국 출범, 88 서울올림픽 성공에 이어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해 1988.12월 총리급 회담 개최를 제안하며 비롯
- 16) 1991.9월 노태우 대통령의 제24차 UN총회 기조연설 : 남북의 동시 UN 가입에 따른 평화공존시대를 위한 실천과제 → (1)불안한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2)한반도 전쟁위험 제거를 위한 실질적 군비감축, (3)남북간 자유로운 교류
- 17) 김강녕, “남북한 관계와 군비통제”, 신지서원, 2008.

남북군사 공동위원회 (12조,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검증 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 협의·추진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 설치·운영
남북군사 분과위원회 (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월 내 회담 테두리 내 남북군사분과위원회 구성 불가침에 관한 합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 협의

- (3. 남북화해 부속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일한 합의주체(정원식-연형묵)가 1992.9.17일 제8차 회담 시 채택

※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장(남북화해) 이행·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로, 이 중 제13조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시각 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통한 상호 비방·중상을 금할 것 규정

- (4.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일한 합의주체(정원식-연형묵)가 동 합의서의 제2장(남북불가침) 이행·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로서 「남북화해 부속합의서」와 함께 채택, <표 5>와 같이 신뢰구축 합의

<표 5>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의 주요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안

상호 일체의 무력 사용행위 금지 (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방에게 일체의 무력 도발행위를 하지 않음
상호 정규·비정규 무력 침입 (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비정규 무력을 침입시키지 않음
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증강, 정찰활동 중지 (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을 증강하지 않고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영해·영공 봉쇄 금지 (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
서울-평양 안전보장 군사공동위 (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평양지역의 안전보장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에서 계속 협의
우발적 충돌 가능 시 상호통보 (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발적 충돌·침범 가능성을 발견했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 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

관할구역 침범자(物) 송환 (5조)	• 상대측은 관할구역 침범 인원·선박·함정·비행기 긴급 확인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함
합의서 위반 시 공동조사 (5조)	•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본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함
관할구역 불가침, 해상 협의 (9·10조)	• 지상·공중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하고,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
南 국방-北 인민무력 부장 직통전화 (12조)	•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 그러나 북한은 한미의 'Team-Spirit' 연합훈련 재개(1993.3월) 계획을 명분으로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
- 결국 1993.1.27일 北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남북간 대화 전면 거부 선언, 군사적 신뢰구축 논의는 이 정부에서 진전 중단
- 1993.2월 출범한 김영삼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동년 3월 NPT¹⁸⁾ 탈퇴를 선언한 북한에 5월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 제의
 - 남북 쌍방 합의에 따라 1993.10월~1994.3월간 총 8회에 걸쳐 중단과 계속을 반복하며 열린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특사교환까지 논의
 - 그러나 제8차 회의에서 북측의 '서울 불바다' 등 전쟁위협 발언으로 회담 분위기가 극도로 악화되고 북측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실무접촉 중단
 - 1994.6월 미 카터 前대통령의 방북으로 한반도 안보위기는 일단 수습, 그러나 1달 뒤 7월 김일성 사망에 따라 정상회담 무기한 연기 및 정세 악화
- (5. 제1차 국방장관회담) 2000.9.26일 조성태 당시 국방장관 및 北 김일철 조직지도부장 주체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간 회담 공동보도문」 형태의 합의선언문 채택
 - 1998.2월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1)한반도 냉전종식, (2)남북 평화공존, (3)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2000.3.9일 '베를린 선언' 발표

18)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핵확산금지조약 / 1969.6.12일 UN총회 채택, 5개 핵보유국(미·소·중·영·프)은 핵무기 및 기폭장치의 제3국 이양 금지, 비핵보유국은 핵개발 금지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IAEA 사찰 의무화 / 한국은 1975.4.23일 비준국, 북한은 1985.12.12일 가입 후 1993.3.12일 및 2003.1.10일 재차 탈퇴 선언

- 북한이 이에 호응하며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그러나 ‘6.15 공동선언’에 군사분야 합의안은 미포함돼 군사긴장 완화를 위한 별도의 ‘제1차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표 6>과 같이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

※ 북측에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지속 제의한 결과 2000.9월 제주에서 개최

〈표 6〉 ‘제1차 국방장관회담’의 주요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안

민간 교류·협력 군사보장 (1항)	• 쌍방은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문」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협력 보장을 위한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
철도·도로 공사 군사보장 (3항)	• 쌍방은 당면과제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공사를 위해 각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 차량, 기재들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
남북 관할지역 설정 협의 (4항)	•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해 남북 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해 해결
제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5항)	• 2차 회담을 11월 중순에 북측지역에서 개최

- 최고 군사당국자간 남북 긴장완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전쟁위협 제거가 긴요한 문제임을 공감하고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대내외 천명
- 단, 우리 정부는 군사긴장 완화 및 군사회담 정례화에 초점을 둔 반면 북한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문제에 국한하는 등 이견이 존재해 조정·협상
- 이후 남북간 군사접촉은 2000.11월~2003.12월간 총 20회의 실무회담을 통해 양자통행에 대한 군사지원 및 보장대책 협의를 중심으로 추진

※ 2002.9월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 및 2003.1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채택

- 2003.2월 출범한 노무현정부는 ‘평화번영’¹⁹⁾ 정책을 표방하며 1999.6월 1차 연평해전, 2002.6월 2차 연평해전으로 악화된 서해상에서의 군사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회담부터 추진, 이는 2007.10월과 11월 각각 개최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및 ‘제2차 국방장관회담’으로 연결

19) “한반도 평화증진은 북핵을 비롯 안보현안을 해결하는 토대 위에 남북간 실질협력을 증진,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한다”

- 실제로 2004.2월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및 2004.5월~2007.7월간 총 6회에 걸쳐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추동력으로서 역할
- 이 중 2004.6월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쌍방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와 비무장지대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대해 일괄 타결 및 「6.4 합의서」를 채택·발효해 군사긴장 완화
- 이후 2004.7.14일 北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에 따른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빌미로 남북대화가 전면 중단, 2006.7.4일 北 대포동-2호 시험발사 및 10.9일 1차 핵실험으로 군사회담도 단절
- 그러나 다시 2007년 6자회담을 통한 ‘2.13 합의’ 이후 남북간 대화 시작, 이것이 1차 이후 7년 만의 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까지 순항
- 특히 총 7개조 21개항으로 구성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는 (1)최고 군사당국자간 대화 재개로 긴장완화 실행책 마련, (2)「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군사공동위 가동 및 구체적인 군사적 신뢰조치 추진, (3)6.25전쟁 유해 공동발굴에 대한 공감대 형성, (4)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및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 등 교류·협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보장책 적시 마련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
- (6. 10.4 남북정상선언) 2007.10.4일 노무현 대통령 및 北 김정일 국방위원장 주체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 발표, <표 7>과 같이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

〈표 7〉 ‘10.4 남북정상선언’의 주요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안

적대관계 종식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상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 • 남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하게 준수
서해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설정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은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 지정
협력사업 군사보장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보장 조치 등 군사적 신뢰구축 지속 협의
종전선언 추진 (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 (4항)	• 남북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2005년)」 및 「2.13 합의(2007년)」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
국방장관회담 개최 (3항)	• 한국의 국방장관과 北 인민무력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 평양에서 개최

- (7. 제2차 국방장관회담) '10.4 선언'의 이행을 위해 2007.11.29일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 및 北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주체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채택, <표 8>과 같이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

〈표 8〉 '제2차 국방장관회담'의 주요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안

6.4 합의 등 군사합의 준수 (1항)	• 「6.4 합의(2004년)」을 비롯해 이미 채택· 발효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
통신연락체계 현대화 (1항)	• 쌍방간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다양한 협상통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확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2항)	•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협의·해결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설정 (3항)	•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 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남북 정상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결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골재채취 (3항)	• 한강 및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으로 골재(20)를 채취할 수 있는 구역 설정
종전선언 (4항)	•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종전선언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협력 및 신뢰조치 추진
유해발굴 (4항)	• 전쟁시기의 유해발굴 문제가 군사적 신뢰조성 및 전쟁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추진대책을 협의·해결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군사적 보장 (5항)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서해 공동어로,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별도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

20) 하천, 산림, 공유수면 등 지상 및 지하에 부존된 채석용 암석, 모래, 자갈 등으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가 되는 중요자원

북측 민간선박 해주항 직항 (5항)	•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 설정과 통항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함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5항)	• 개성 및 금강산 지역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도록 2007.12.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
3통의 군사적 보장 (5항)	• 남북관리구역의 3통(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를 2007.12월 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해 협의·채택
제3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5항)	• 2008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 - 2008.2월 MB정부 출범으로 무산
백두산 관광 직항로 (5항)	•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된 군사적 보장조치 협의·해결

□ 이상의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안들은 이후 ‘잃어버린 11년’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무산, 방안은 무수히 채택·도출됐으나 극도로 악화된 남북관계 및 법제화 등 실질적 추진동력의 부족이 한계로 작용

- 남북 공동으로 실천 가능한 합의안부터 동시적으로 법제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선언적 합의’를 초월해 구속력·실행력 있는 관계개선을 경험했을 것
- 2000년 이후 남북간 군사회담은 2000.9월 ‘제1차 국방장관회담’부터 총 50회 진행됐으나 경험을 위한 군사적 보장에만 중점²¹⁾,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미흡했다는 평가

〈표 9〉 역대정부의 2000년 이후 남북 군사회담 개최 내역

김대중 (15회)	00년 4회	01년 2회	02년 9회	—	—
노무현 (29회)	03년 6회	04년 5회	05년 3회	06년 4회	07년 11회
이명박 (4회)	08년 2회	09년 0회	10년 1회	11년 1회	12년 0회
박근혜 (2회)	13년 0회	14년 1회	15년 1회	16년 0회	17년 0회

자료 : 국방부, 「남북군사회담 개최현황」, 2017.7. ; 김진무, “역대 남북군사회담 평가와 대북협상 방향”, 세종정책브리핑 2018-09, 세종연구소, 2018.4.5. (비교·조정)

- DJ정부 15회, 참여정부 29회에 비해 MB 및 박근혜 정부 시기 각각 4회, 2회로 군사회담 횟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도 합의의 한계 심화에 영향
- 합의 후 북한의 소극적 태도, 남남갈등, 단기성과 치중 등도 부정적 작용

21) 성기영,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 제6차 민주연구원 외교안보포럼 자료집, 2018.5.3.

- 北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군사옵션 제기 등 북미간 강대강 대치 속에 극적으로 조성된 대화국면, 그로 인한 ‘판문점선언’ 제2조의 군사적 신뢰 합의는 ‘10.4 선언’ 등 역대 합의를 발전적으로 계승·진전
- 이번 합의안이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역대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반드시 ‘실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본고 제Ⅲ장과 IV장은 차후 군사 회담 의제의 핵심쟁점 3가지를 검토하고 협의의 구체적 방향성 제시

1. 비무장지대(DMZ)의 무장화

(1) 개념, 설치경과 및 특성

-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이하 DMZ)’는 1953.7.27일 총 250km 길이의 ‘군사분계선(휴전선, 이하 MDL)’을 중심으로²²⁾ 남과 북 각각 2km씩 총 4km 폭에 규정·설치된 비무장 중립지대
 - DMZ는 전쟁, 분쟁 및 ‘정전상태’에 있는 2개 이상의 국가, 군사세력, 동맹 간 국제조약 또는 협약에 의해 무장이 금지된 중립지역(Neutral-zone)
 - 군대주둔, 무기배치 및 어떠한 군사시설 설치도 불허하고 이전에 설치된 것들도 철수·철거하도록 규정된 것이 일반적
 - 국제법상으로는 “병력주둔 및 군사시설 건설을 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국가의 영토, 영해, 하천, 운하 및 상부공역을 포함한 특정구역”으로 정의
 - 통상 ‘국제감시단’이 편성돼 국가간 DMZ 이행여부 감시
 - 남북간 DMZ 설치는 1953.7.27일 조인된 ‘정전협정’²³⁾에 근거

22) DMZ : **De**Militarized **Z**one / 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

23) 「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총 5개조 63개항으로 구성

- 본 협정 제1조제1항은 DMZ 설치에 대해 “1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간 1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고 규정

□ DMZ 설치 논의는 6.25전쟁 중이던 1951.7.10일 개성 실무회담에서 시작, 2년 후 ‘정전협정’ 체결 즉시 발효돼 현재까지 65년간 유지

- 1952.7.27일 본회담, 동년 10.22일 판문점 휴전회담을 거쳐 11.27일 1차 합의에 도달했으나 이후 30일이 경과해도 휴전이 되지 않아 무효화
 - 주요 합의내용은 (1)휴전협정 조인까지 전투 계속, (2)전투접촉선을 MDL로 해 남북으로 각각 2km씩 4km 폭의 DMZ 설치, (3)30일 내 휴전협정이 조인되지 않으면 MDL은 협정조인 시의 접촉선으로 재설정 등²⁴⁾
- 이후 회담이 6개월간 중단되다 1953.6.8일 전쟁포로 교환문제 타결에 따라 동년 7.22일 MDL 재확정, 27일 ‘정전협정’ 체결 및 MDL 최종확정에 따라 현재와 같은 DMZ 설정
 - 이 과정에서 1953.7.26일 휴전협상 제10차 회의 시 북한은 DMZ를 38선을 분계선으로 남북 각각 10km로 설정하자고 제의
 - 이에 유엔사는 다음날인 7.27일 제11차 회의에서 DMZ를 당시 전투접촉선 중심 20마일(32.2km)로 할 것을 역제안²⁵⁾하는 등 지금보다 더욱 넓게 DMZ가 설치될 수도 있었으나 결국 전선으로부터 남북 각각 2km로 설정

□ 한반도 DMZ의 특징은 (1)양측 합의에 의해 설정, (2)MDL 기준의 동일한 폭, (3)유엔사 관할 하의 감시체제(군정위·중감위)²⁶⁾ 구비 등²⁷⁾

- (1)콜롬비아의 경우 정부군이 반군에 일방적으로 DMZ 부여, 이라크-쿠웨이트 간 DMZ는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설정

24) 이성춘, “비무장지대 남북 군사력 변화와 평화적 공존을 위한 신뢰구축 방안”, 동국대·강원대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16.

25)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도서출판 소화, 2001.

26)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27) 권양주, “DMZ의 무장화와 충돌에 관한 고찰”, 신안보연구, 190, 2017.6.

- (2)이라크-쿠웨이트는 국경선을 기준으로 이라크측에 DMZ를 더 넓게 설정, 콜롬비아도 정부군이 반군에 편향적으로 부여
- (3)베트남의 경우 유엔사가 아닌 남북 각각의 베트남군에 의해 DMZ 관리, 콜롬비아는 정부군이 DMZ를 일방적으로 감시하는 체제이며 이라크-쿠웨이트도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감시하는 상황

(2) 무장화의 역사와 비무장화 노력

□ ‘정전협정’²⁸⁾에 따라 적대행위가 금지된 ‘완충지대’로서 유지돼야 할 DMZ는 현재 우발적 충돌·전투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상태

- 비무장의 원칙을 벗어나 세계 최고수준의 ‘중무장’ 상태가 된 DMZ는 남북 간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공간으로서 매김
 - DMZ 내 주요 군사시설물은 GP²⁹⁾, GOP³⁰⁾, 표식물, 철책, 대북심리전 장비, 대전차 장애물, 항공기 월경 방지판, 투광등, 지뢰지대 등
 - 북한은 1963~1965년간 MDL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진지 구축 및 중화기·전투병력 집중배치, 70년대 초에는 고지대 중심의 GP를 지하 요새화
 - 또한 보병군이 아닌 별도 ‘민경대대’를 GP에 배치해 ‘정전협정’ 위반 회피
- 최근까지 남북측 모두 DMZ 내 철책선을 전진 배치하고 GP 설치 및 중화기 반입을 통한 요새화·무장화도 강화했던 상황
 - 북한은 DMZ 내 1~1.5km까지, 한국은 0.5km까지 진입해 철책선 설치
 - 중서부~중부전선간 북한이 설치한 GP는 160~200여 개로 우리 군의 3~4배 수준(DMZ 남쪽 GP 40~60여 개, 병력 약 1,600명)
 - DMZ 내 중화기 반입은 원칙상 불가해 남북측 GP 근무자들은 소총·권총 등 개인화기만 운용 가능하나 북한은 박격포, 14.5mm 고사포, 무반동포 등을 배치했고 우리 군도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등 반입

28) 제1조제1항. “1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해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제6항.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로 향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29) Guard-Post : MDL과 남방한계선(SLL) 사이에서 DMZ를 관측하는 감시경계초소

30) General-OutPost : SLL 철책에서 24시간 경계근무, 적 기습에 대비하는 소대단위 초소

- DMZ 내 北 군사력 세부 배치현황은 군사기밀로서 접근 불가, 지상군 전력 배치실태를 통해 군사전략이 DMZ 및 전방 중심으로 수립됐음은 파악
 -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배치해 언제든지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한 상황³¹⁾

※ 전방에 배치된 170mm 자주포 및 240mm 방사포는 수도권에 대한 대량 집중공격 가능, 최근 개발 완료된 300mm 방사포는 중부권 지역 공격 가능

- DMZ를 중심으로 발생한 주요 충돌사건은 간첩침투 760건, 직접적 DMZ 충돌 560건, 간첩침투 및 DMZ 충돌 복합 219건 등 총 1,764건 집계³²⁾
 - 이는 '정전협정' 후 북한의 육·해·공 전체 도발(3,088건³³⁾)의 57.1% 비중

□ 중무장된 DMZ에 대한 '실효적' 비무장화 추진의 시기는 크게 3단계로 구분, 협의·합의는 계속됐으나 약 50년간 미실행된 채 한계 노정

- (70~80년대) 군정위가 추진하고 우리 정부는 북측에 촉구하는 방식으로 실행, 유엔사·한국의 비무장화 제안과 북·중의 반발 또는 무호응의 반복
 - 1971.6.12일 제317차 군정위에서 유엔군 수석대표 로저스 소장의 4개항 제의³⁴⁾로 시작, 이에 북·중은 강력 반발하며 동년 7.29일 제319차 군정위에서 '평화유지를 위한 7개항'³⁵⁾ 역제안
 - 1972.2월 김용식 당시 외무장관은 대북성명을 통해 북측에 로저스案 수락 촉구, 이는 한국정부 고위당국자로서의 DMZ 비무장화에 대한 최초 제안
 - 1981.11월 제408차 군정위에서 제의된 'DMZ의 진정한 비무장화'에도 북측 반응이 없자 손재식 당시 국토통일원 장관은 7개 대북 시범사업 제안
 - ※ (1)경의선·도로 연결, (2)설악산·금강산 자유관광지역 공동설정, (3) DMZ 내 공동경기장 건설, (4)DMZ 자연생태계 공동학술조사, (5)판문점 통한 외국인 자유왕래, (6)남북 공동어획구역 설정, (7)DMZ 내 군사시설 완전 철거

31)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12.

32)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DMZ평화센터, "분단 70년 DMZ 남북 군사충돌 사례 DB 구축 (1945~2015년) 제2차년도 보고서", 2016. (동아일보 보도 중심의 집계)

33)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12. (2015년까지의 집계 기준, 2016년까지는 3,094건)

34) (1)DMZ 전체의 비무장화 확대실시, (2)쌍방이 합의된 지역으로 군사인원 철수, (3)군정전위의 군사시설 파괴조치, (4)무장인원의 DMZ 출입금지

35) (1)주한미군 즉각 철수, (2)한국 내 신무기 도입 중지, (3)한국 내 도입된 각종 무기 반출, (4)군사도발·침략행위 금지, (5)DMZ 내 군사시설 철수·파괴, (6)JSA 내 질서유지, (7)남북 민간인들의 DMZ 월경 및 자유왕래 허용

- (90년대)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남북 공히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가운데 1991.12.13일 「남북기본합의서」라는 진일보한 합의 도출
 - 1988.10월 노태우 대통령의 UN총회 연설³⁶⁾로 시작해 1989.9.11일 국회 특별연설에서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시로 연결
 - ※ (1)DMZ 내 '평화구역' 설정 및 공동사무처 등 남북연합기구 설치, (2) 평화 구역을 '통일평화시'로 발전, (3)경의선용 통일역사 건립, 이산가족 '만남의 광장' 설치, 민족문화관 및 남북학술교류센터 건립, 남북 상품교역장 설치, 운동경기장 및 종교인 공동집회장소 건설, (4)제2, 3의 '통일평화시' 확대 등
 - 북한도 1990.5월 최고인민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연합회의 등을 통해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10개항'³⁷⁾ 발표
 - 이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DMZ의 비무장화에 대한 남북간 '최초의' 합의, 특히 제1차와 5차 고위급회담을 통해 '실질적 평화지대화' 논의
 - ※ (1차)북측이 DMZ의 평화지대화 및 DMZ 내 군사장비 철수, 군사시설물 해체, 민간인 개방 등 제의, (5차)합의서 발표 후 3개월 내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및 DMZ의 평화적 이용 협의에 최초로 합의
- (2000년대) DMZ의 비무장화가 실무적으로 논의된 시기였으나 북핵위기, 남북관계 경색, DMZ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등으로 지속성에 한계
 - 2007.10.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1)중화기 우선철수 및 (2)점진적 GP 철수를 제의³⁸⁾하는 등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에 대한 남북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정작 '10.4 선언'에서 미합의
 - ※ '10.4 선언' 시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한 '서해평화특별지대'만 명기
 - 그러나 이같은 정상회담으로 남북 당국의 실무자가 본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경의선 및 동해선의 도로·철도 연결사업 등 남북 양측이 DMZ의 일부를 평화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
 - 이후 11년간 'DMZ의 평화지대화' 논의가 지속 발전되지 못한 것은 악화된 남북관계 속에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탓이 가장 크나, DMZ 문제에 접근하는 남북간 방점의 차이도 컸다(경제-군사 측면 혼재)는 평가

36) "DMZ 내에 '평화시'를 건설해 이산가족 상봉면회소, 민족문화관, 학술교류센터, 상품 교역장 등을 설치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자"

37) 군사훈련·연습 제한, **DMZ의 평화지대화**, 직통전화 등 우발적 충돌방지,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DMZ 내 중립국 감시군 배치, 협상을 통한 불가침선언 채택 등

38) 동아일보 보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2013.6.26.

2.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정당성

(1) 개념 및 법적성격

□ 서해 북방한계선(이하 NLL³⁹⁾)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8.30일 유엔사에 의해 규정된 해상 군사분계선(MDL)

-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간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서해상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 기준 3해리(5.56km)에 입각해 NLL 설정
 -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북단과 북측에서 관할하는 황해도 웅진반도 사이(북위 37°35′~38°03′)의 중간선 기준
 - 유엔사측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이행 및 해상구역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해상경계선을 설정하고 1953.8.30일 북측에 공식 통보, 이후 1973.10월 북한의 NLL에 대한 입장 돌변 전까지 20년간 이의 없이 유지

□ 서해 NLL은 법적으로 명확한 (1)군사분계선(MDL)이자 (2)해상경계선

- ‘정전협정’의 원칙에 기초해 설정하고 관습법적으로 확립된 해상 MDL
 - 이는 1992년 효력이 발생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 명문으로 규정
 - ※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7.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
 - 남북 양측이 ‘정전협정’상 무력충돌 재발을 방지하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MDL을 유지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는 해상에서도 당연한 사안
- 남북이 모두 국제법적 주체로서 정당하게 지켜야 할 ‘실질적’ 해상경계선
 - 1992.9.17일 양측간 합의로 발효된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도 “남북의 해상불가침 구역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이라 규정
 - 즉, 서해 NLL은 남북간 새로운 해상경계선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현실적 해상경계선으로서의 법적가치 보유

39) Northern Limit Line

- 북한이 유엔사의 통보에 이의 없이 준수한 점, 유엔사가 해군력을 통해 규정을 보장한 점 등을 보면 남북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⁴⁰⁾

(2) NLL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

□ 한국정부와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확고한 조치로 보나, 북한은 해군력을 증강한 1973년 이후 본격적으로 NLL 부인⁴¹⁾

- 유엔사는 서해 NLL 해역이 1953년 당시 전쟁수역이자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수역이긴 해도, NLL이 MDL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을 인정
 - 유엔사는 1999.6.11일 북측에 장성급회담을 제의하며 “NLL은 46년간 북한군-한국군 간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 수단, 군사력 분리에 기여한 실질적 경계선으로 사용”돼 왔다고 공식보도로 발표
 - 동년 6.15일 회담에서는 “NLL은 실질적 해상분계선으로 40여 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왔으므로 협상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 협의, 현재의 NLL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 천명
 - 우리 정부는 이에 北 선박의 NLL 침범 및 월선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취급, 6.25 참전국 또는 다른 국가들의 NLL에 대한 문제제기도 전무
- 북한은 1973년까지 20년간 NLL 준수, 그러다 동년 10~11월간 NLL을 43회 침범한 ‘서해사건’을 필두로 NLL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
 - 1973.12월 제346·347차 군정위에서는 “황해도 및 경기도의 도계선 이북 수역은 북한의 연해(沿海)”라고 주장
 - 1977.7.1일에는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동년 8.1일에도 해상경계선을 경제수역 경계선으로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NLL 불인정
 -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체결 시 잠시 NLL을 인정했으나,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 합의가 지연되며 다시 갈등 야기·계속
 - 이는 1차 연평해전(1999.6.15), 2차 연평해전(2002.6.29), 연평도 포격도발(2010.11.23) 등의 남북간 서해상 교전으로 연결되며 군사적 긴장 고조

40) 김병기, “서해상 북방한계선의 법적성격”, 토지공법연구, 9, 2000.

41)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2007.1.2.

□ 북한은 NLL을 부인하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과거 북한이 사실상 NLL을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이를 활용한 전례 다수⁴²⁾

- 1959년 北 중앙통신사가 발간한 「조선중앙년감」은 NLL을 MDL로 표기
- 1963.5월 군정위 제168차 회의에서 北 간첩선의 위치에 대해 논의 중 유엔사가 간첩선이 NLL을 침범해 남하했다고 항의하자, 북한은 “동 시점에 NLL 북쪽에 있었다”고 강력 주장하며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⁴³⁾
- 1984.9.29.~10.5일간 北 적십자가 수해지원 물자를 남한에 인도하는 과정에서 경비함정·군함 등 호송선단이 수송선박을 NLL상에서 인수인계
 - 북한이 NLL을 실효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 NLL의 존재성에 대한 단순 인지를 넘어 명확하게 인식한 대표적 사례
- 한국정부가 1993.5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간행물인 「항공항행계획(ANP)」에 ‘비행정보구역(FIR)’을 NLL에 준해 수정·공고하고⁴⁴⁾, 1998.1월 해당안이 발효된 전·후 북한은 이에 대해 전혀 이의 미제기
 - 비행정보구역은 조난항공기에 대한 탐색·구조 임무로 인해 통상 해당국 주권이 미치는 구역에 설정, 북한이 NLL을 한국의 주권구역으로 인정한 것
- 2002.12.11일 대청도 북방에서 좌초된 ‘삼광-5호’ 승조원을 NLL상에서 인제한 사례 역시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
- 그러나 북한은 NLL을 부정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⁴⁵⁾에 나열된 등거리선 및 형평성의 원칙, 당사국간 합의, 자연연장의 규칙 등에 따라 새롭게 해양경계선을 확정하자는 입장으로 최근까지 견지했던 상태⁴⁶⁾

42) 김태준, “NLL 분쟁과 남북한 해양신뢰구축 방안”, 국방연구, 49(1), 2006.6. ; 정경환, “NLL 문제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전략”, 통일전략, 8(3), 2008.12. ; 정민정, “북한 한계선(NLL)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58(2), 2013.6.

43) 국방부, 「서해 해상경계선 관련 북한 주장의 부당성 및 우리의 입장」, 1999.

44) 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ANP : Air Navigation Plan / FIR : Flight Information Region

45)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46) 이재민, “북방한계선(NLL) 관련 국제법적 문제 재검토”, 서울국제법연구, 15(1), 2008.

(3) 평화수역화 노력

□ 우리 정부는 2007년 제2차 정상회담 및 국방장관회담을 필두로 서해 NLL 해역에 대한 ‘평화수역화’를 본격 추진했으나, 합의 무산

○ 1999~2010년간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서해상에서의 남북간 무력교전, 그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 「10.4 선언문」 제3항에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을 설정”할 것 명시

- 「제2차 국방장관회담 합의서(2007.11.29)」 제3항에서도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에 대한 인식공유 및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협의·해결” 규정

※ 제2항과 5항도 관련 : (2항)“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를 통해 협의·해결”, (5항)“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별도 군사실무회담에서 협의·해결”



[그림 1] ‘10.4 남북정상선언’ 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안안

자료 : 정책브리핑 보도, “군사벨트를 경제벨트로.. 왜 해주인가?”, 2007.10.10.

○ 그러나 ‘10.4 선언’ 및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의 서해 NLL 해역에 대한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화 협상은 미합의된 채 결렬

- 수역규정에 필요한 기준선 문제로 우리 정부는 NLL 기준 남북간 등거리 또는 등면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서해 NLL 남쪽에 임의로 해상 분계선(서해 경비계선)을 기준해 그 경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설정

※ ‘10.4 선언’ 시 연평도-소청도 사이 완충수역 설정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안을 협의했으나 군사적 안전성 확보 등의 문제로 합의 실패

-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90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내용 포함, 이것이 ‘판문점선언’의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화’ 합의로 연결된 것

3. 군사회담의 실효성

- 남북 군사회담은 그간 다수 개최되며(2000년 이후 50회) 다양한 합의점도 타결해왔으나, 남북간 개최·협약의 설득 및 합의 미이행 등의 과정이 반복되며 ‘구체적 실천’까지는 연결되지 못한 상태

〈표 10〉 2000년 이후 남북 군사회담을 통한 합의서 도출 내역

구 분	횟 수	채택된 남북합의서
국방장관회담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9.26)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간 회담 공동보도문 • (2007.11.29)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서」
장성급 군사회담	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6.4)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 (2007.5.8)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공동 보도문」 • (2007.5.8) 「동·서해지구 남북열차 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 • (2007.12.13)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군사실무회담	4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9.17)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 (2003.1.27)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 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 • (2003.9.17) 상기 합의서(1.27)의 「보충합의서」 • (2003.12.23)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 • (2004.6.12)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자료 : 김재철,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전략적 선택”, 한국동북아논총, 14(3), 2009. ; 김재철, “남북한 군사회담과 군사적 긴장완화 가능성”, 서석사회과학논총, 4(1), 2011.

- 남북간 군사회담의 시초인 ‘남북 군사분과위’는 1991.12.13일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2개의 부속합의서(남북화해, 남북불가침) 협의를 위해 구성된 고위급회담의 하위기구로서 가동
 - 이에 1992.3~8월간 총 8차에 걸쳐 군사회담이 개최됐으나, 북한이 합의서(1992.9.17) 이행에 앞서 ‘Team-Spirit’ 중지를 요구하며 회담 중단
 -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군사회담의 효시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유엔사(클라크)·북(김일성)·중(펑더화이)이 참여해 남북간 군사회담이 아니며, 이후 80년대까지 군사회담 없이 간헐적 제안 및 협의만 진행
 -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 공동선언’에는 북한의 군사문제 협상 거부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누락
 - 2000.9.25~26일간 제주에서 개최된 ‘제1차 국방장관회담’에서 군당국은 공동보도문에 ‘군사적 긴장완화’ 문구가 포함될 것을 북측에 강력 촉구
 - 우여곡절 끝에 제2항에 동 문구를 넣는 것과 더불어 2번째 국방장관회담을 북측에서 동년 11월에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이후 7년간 무산
 - 군사문제는 남북간 논의 및 협상할 사항이 아니라는 3개월 전 ‘6.15 공동선언’ 시의 그들 입장을 고수한 것
 - 2004.5월 노무현정부는 서해상에서의 충돌방지 문제 논의를 위한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에 합의했으나, 회담 직전 무산 위기에 직면
 - 북한이 우리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더 절박한 사안으로서 MDL 일대의 심리전 중단 및 수단 철거 문제를 반드시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 장성급회담 성사에 공을 들여온 우리 정부는 북측의 주장을 수용하고, 동년 서해 충돌방지 및 심리전 중단을 내용으로 담은 「6.4 합의서」 타결
 - 북한은 여타 군사회담에 비해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보장을 협의하는 군사당국자간 실무회담에서 적극성 표출
- 올해 극적으로 조성된 대화국면과 ‘4.27 판문점선언’을 통한 군사적 소통의 기회가 일시적·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법제적 담보 필요

IV 군사적 신뢰구축의 방향

1. DMZ의 평화지대화 (제1항)

(1) 포괄적 평화지대화

□ ‘평화지대화’는 최전선에 포진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측의 비대칭적 군사요소를 제거, 우리 안보이익을 더욱 증대시키는 행위로 남북간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군사·非군사적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충족

Ⅰ 군사적 측면의 평화지대화

- ‘정전협정’ 규정대로 남북 군대가 MDL로부터 각각 2km씩 이격해 DMZ의 ‘진정한 비무장화’가 이루어진다면 군사위협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

※ 이는 「제1차 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2000.9.26)」의 제4항에도 “MDL 및 DMZ를 개방하는 남북 관할지역 설정은 ‘정전협정’에 기초할 것”이라 명시

- ‘판문점선언’ 제3조의 ‘단계적 군축 실현(제2항)’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하 제3항)’ 논의 진전에 맞춰 ‘선후관계’를 판단해 실현 가능한 군사적 신뢰조치부터 단행

- 차후 개최될 군사회담에서 (1)DMZ 내 점진적 병력감축 및 첨단장비로의 대체, (2)‘정전협정’ 체결 당시의 DMZ에 따른 철책선 재설치, (3)단계적 중화기 및 GP 축소 등의 의제들도 일괄적으로 협의 필요

※ 남북 병력이동, 북한의 철책 재구축 등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포괄적 협의단계부터 세부추진에 대한 단·중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접근

- 선제적 조치로서 ‘5월 중 개최’로 합의된 군사회담 시 (1)군 인사교류 활성화, (2)군사직통전화 설치, (3)상시 대화채널 가동·유지 등 타결·추진

- 특히 군사직통전화는 남측 전방사단, 북측 전연사단, 철수되기 전 GP 및 GOP, 합참 및 北 총참모부, 국방부 및 北 인민무력부 등에 대폭 확대

- 이번 군사회담에서 군사적 신뢰조치 및 단계적 군축 실행을 위한 남북간 ‘군사협의체(군축회의, 군축위 등)’ 구성이 타결된다면 신뢰구축에 큰 효과

- DMZ ‘관할권(Jurisdiction-authority)’은 유엔사가 전적으로 행사하므로, 평화지대화 관련사안 모두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복측과 추진

㉒ 문화·환경적 측면의 평화지대화

- DMZ에 대한 ‘평화적 이용’이 정치적 차원에서도 ‘체제유지에 유리한 결과를 줄 것’이라는 대내·외적 확신을 북한에 심어줄 필요
- 이를 위해 (1)‘DMZ 생태계 공동 연구·조사’ 선행, (2)‘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3)‘평화생태호수공원’ 조성 및 ‘UNESCO 접경생물권보전지역(TBR⁴⁷⁾)’ 지정, (4)‘유엔환경기구’ 유치 등 문화·환경적 평화지대화 추진
- DMZ의 평화지대화가 본격적으로 논의·추진되면 선행적인 非군사적 조치로서 환경부 중심의 ‘DMZ 보전대책’ 수립 및 생태계 공동조사 실행 가능
 - ※ 경기 파주 임진강 하구~강원 고성 동해안간 총 248km, 총면적 1,557m²의 DMZ 일대에는 멸종위기 91종을 포함해 총 5,978종의 야생 동·식물 서식⁴⁸⁾
- ‘제한적 평화지대화’에 입각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좁은 범위에서의 공원화를 우선 추진한 후 남북 상호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점차 확대
 - ※ 본 조성사업은 박근혜정부 때도 핵심 대북사업으로 추진, ‘판문점선언’ 이후 통일부는 이미 관련 연구용역 발주 등 사업재개 준비중⁴⁹⁾
- ‘평화생태호수공원’은 북한강 상류지역(강원 화천 ‘평화의 댐’~北 임남댐 사이)에 조성해 남북이 평화·생태·문화·관광적으로 활용 추진
- 우리 정부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1년부터 DMZ 및 민통선 일대에 대해 ‘UNESCO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보호를 추진했으나 남북관계에 막혀 번번히 실패, 現 추진상황에 핵심지역인 DMZ를 포함해 지정 재추진 필요
 - ※ 현재 강원도 및 경기도 연천군이 ‘DMZ가 빠진 민통선 북부지역’에 대해 지정 추진, UNESCO 한국위원회가 실사를 마쳤고 9월 말 신청서 제출 계획
- DMZ의 평화지대화를 국제적 틀 안에서 취급하기 위해 ‘유엔환경기구’를 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지점인 강원 고성에 유치하는 방안⁵⁰⁾도 검토

47) Transfrontier Biosphere Reserve : 환경보존이 우수한 생태계로 인정받은 지역 중 2~3개국에 접해 다수의 국가가 공동으로 보전활동을 펼치는 곳, 현재 31개국 20곳 지정 (중앙일보 보도, “DMZ 빠진 접경 그린벨트.. 남북 합의로 제모양 갖출까”, 2018.5.1.)

48) 국토 총면적의 1.6%에 불과하나 한반도 생물종의 24% 비중, 연천 및 철원 일대에서 564종 추가 발견 (국립생태원, 「2017 DMZ 일원 생태계 조사 보고서」, 2018.5.)

49) 매일경제 보도, “DMZ 평화공원 다시 추진한다”, 2018.5.2.

50) 손기웅,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새로운 도전”, 국토, 2013.12.

- 독일은 통일 이후 1,393km 길이의 동·서독 접경지대를 ‘그린벨트’로 지정해 난개발 방지 및 자원복원 추진, 그 결과 현재는 600여 종의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서 역할
- 국경을 맞댄 체코의 크르코노세 국립공원 및 폴란드의 카르코노제 국립공원은 1959년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하나의 생태계’로서 운영

㉓ 경제적 측면의 평화지대화

- 남북 모두 실제 경제실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 현실성 있는 사업부터 접근
- ‘문화·환경적 평화지대화 사업’들의 경제적 측면에도 방점, 북한에 정치적으로 부정적 인식은 주지 않으면서 군사적 제한사안을 초월하도록 준비
-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접경지역 평화벨트’ 추진안⁵¹⁾과 같이 남북 지역별 특산물 판매를 위한 ‘공동시장’ 개발, 관광벨트(지구) 조성 등의 경제사업들을 지자체를 포함한 민·관 차원에서 공히 실행
-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5대 공약에도 포함
- 이로써, ‘경제를 통한 평화안보’를 추구하며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환경·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남북 상생의 경제공동체 실현

(2) 단계적 평화지대화

□ 통상적 군축의 3단계⁵²⁾ 중 ‘군사적 신뢰구축 → 운용적 군비통제’의 2단계에 맞춰 평화지대화 추진 및 ‘체계적 검증’ 필수 동반

- ‘군사적 신뢰구축’은 앞서 <표 2>와 같이 ‘광의의 운용적 군비통제’에 포함되므로 해당범위에 맞게 기존안 재검토 및 새로운 방안 발굴 제시
- 과거 우리 정부의 1982.2월 ‘7개 대북 시범사업’, 1989.9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활용
- ※ (1)통일역사 건립 및 자유관광지역 설정, (2)공동경기장 건설, (3)자연생태계 공동조사, (4)외국인 자유왕래, (5)군사시설 철거, (6)‘평화구역’ 설정 및 남북 연합기구 설치, (7)‘통일평화시’로 발전, (8)제N의 ‘통일평화시’로 확대 등
- 단, 기존의 이행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칭)DMZ 평화지대화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약화된 중감위·군정위의 역할을 보완하고 검증 체계화

51) 김은옥,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국정과제 심화연구, 민주연구원, 2017.11.

52) 군사적 신뢰구축(MCB) → 운용적 군비통제(OAC) → 구조적 군비통제(SAC)

㉑ ‘비핵화 프로세스’와 연계한 평화지대화 추진

- 6.12일로 계획된 북미정상회담 전·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순 및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첫단추로서 DMZ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실행
-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정부 주도 하에 남북 당국간 「(가칭)DMZ의 평화지대화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같은 명문화된 세부합의서 필요
- 이후 군사적 불안정성을 유발할 확률이 작은 의제들을 중심으로 제한적 협력을 순차적으로 추진, 핵과 별개로 재래식 전력에 대해 항시 고려
- (1)지속적 의사소통을 위한 군사직통전화 등의 상설통신망 개설, (2)남북간 교통망 단계별 복구·확충, (3)DMZ 및 접경지역 생태계 공동조사·복원사업 및 ‘UNESCO-TBR’ 지정 추진, (4)재난방지 협력, (5)공동 수자원 관리사업, (6)역사유적 발굴·복원 등 다양한 초기 조치·사업 진행
- 앞서 제시한 (7)군 인사교류와 함께 (8)군 기본정보 교환, (9)군사회담 정례화 및 ‘군사협의체(군축회의, 군축위 등)’ 구성도 이 단계에 포함

㉒ ‘운용적 군비통제 속 군사적 신뢰조치’로서의 평화지대화 추진

- 북한의 비핵화가 실재화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수준이 초기단계를 넘어설 경우, 더욱 진전된⁵³⁾ 군사적 신뢰조치 추진
- (1)대규모 부대이동 및 군사적 활동·연습·훈련 사전 통보·통제, (2)상호간 출입통제 완화, (3)DMZ 내 지뢰 및 대전차 장애물 공동제거, (4)DMZ 첨단화와 연계해 조기 경보·탐지를 위한 센서지대 설치, (5)남북 공동감시소 운영, (6)DMZ 운용 관련 군당국 실무자간 회담 정례화 등 진행
- 여기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가 더 강화되면 (7)개별 및 소규모 사업지역 내 직통전화 개설 및 무력행위 제한, (8)DMZ 경찰활동 금지, (9)사업지역 내 군사시설 철거 및 무력배치 금지, (10)사업교류를 위한 철책·방벽 일부구간 고정통로 개설, (11)사업지역 축선의 중화기 및 병력 후방배치 등 진행
- 이후 (12)DMZ 완충지대 확대를 위한 군사력 배치 제한지역 설정, (13)공세전력 후방이동, (14)DMZ 내 공격무기 배치제한 등까지 확대 추진
- DMZ 내 지구별 협력사업으로 앞서 제시한 (15)공동시장 및 교류협력지구 조성, (16)DMZ의 생태관광공원화, (17)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추진

53) 선행연구(SIPRI, 2007. ; RAND, 1993.)를 토대로 현실적 신뢰조치 방안 조정·구상

2. 서해 NLL의 평화수역화 (제2항)

(1) 원칙 고수의 평화수역화

□ 서해 NLL은 지상의 MDL과 같은 법적성격 및 가치를 보유한 해상경계선으로서, ‘새로운 합의’ 시까지 확고히 준수한다는 입장 견지

- 북한이 최근까지 주장했던 바와 같이 “서해 NLL을 1982년 해양법의 틀을 가지고” 법적 논쟁을 벌이는 것은 비합리적 행위임을 명확히 천명
 - 북한의 의도는 ‘정전협정’ 체제를 해양법상 협약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
 -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NLL과 같은 경계선이 없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는 타당, 그러나 실효적 경계선이 존재하는 남북간에 이러한 일관적 경계선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⁵⁴⁾
 - 이는 결국 협약을 명분으로 한 ‘정전협정’ 변경, 즉 그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어 차후 협상간 엄밀한 경계 요망
- 북한의 서해 NLL에 대한 2가지 측면(군사적·법적)의 도전을 과거 지속적으로 경험한 바, ‘기준선은 협상대상 아님’을 엄격히 고수하며 협상 추진
 - 북한은 (1)서해상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통해 한국측의 NLL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도전해왔고 (2)끊임없이 법적문제를 제기함으로써 NLL의 법적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행위를 최근까지 계속
 - 이에 우리 군의 해상방위태세를 더 확고히 구축한 가운데 협의 추진 필요
 - NLL의 기준성에 대해 우리 정부는 “서해 NLL은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 공동어로·평화수역 모두 NLL을 바꾸는 것이 아니며 남북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NLL은 손대지 않는다” 공표⁵⁵⁾
-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북한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서해 NLL에 대해 잠정 인정한 것으로 추정, 추후에도 ‘북한의 NLL 인정’이 평화수역화 협상의 필수전제임을 정부의 불변된 입장으로 고수해야 할 것

54) 이재민, “북방한계선(NLL) 관련 국제법적 문제 재검토”, 서울국제법연구, 15(1), 2008.

55) 2018.5.5.일 서해 NLL 관계부처 장관 연평도·백령도 방문 시 조명균 통일부장관 발언

- (1)北 노동신문이 ‘판문점선언’ 전문을 게재하며 ‘북방한계선’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2)선언문 제1조제6항에서 “10.4 선언 시 합의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한다”고 규정한 것 등을 볼 때 위험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평가
- ※ 실제 북한군은 서해 장산곶, 웅진반도 등에 배치한 해안포(76mm, 130mm 대구경 등 4종) 1,000여 문 운용을 ‘판문점선언’ 이후 중단한 상태

(2) 점진적 확대의 평화수역화

□ ‘10.4 선언’ 시 합의안 및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안을 토대로 추진하되, (1)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 (2)상호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해역부터 ‘시범적 평화수역’으로 시작해 점차 적용수역 확대

- 기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案은 ‘10.4 선언’의 합의안을 존중하는 선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과 더불어 ‘당장 실현 가능한 안정적 수역’도 함께 설정해 시범사업부터 추진

□ 우선, NLL 평화수역화 실현을 위한 기반작업으로서 (1)추진사항 검토 제도화 및 (2)對국민·주변국 공감대 형성 노력 필요

㉠ 남북간 ‘NLL 평화수역화 추진 이행·평가 연례회의’ 정례화

- 그간 수차례 합의가 있었으나, 합의안에 대한 이행상태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상황
- 1972년 미·소간 ‘공해상 충돌방지협정’도 양국간 지속된 연례회의를 통해 「헬싱키협약」의 단순 합의로 끝나지 않고, 후속 재검토회의 및 전문가 토의 등을 거치며 추가 타협·협상을 통해 성과 도출⁵⁶⁾
- 평화수역화를 ‘시스템’으로 끌어들이어 합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지속 제시·반영하면 실질적 성과창출이 가능할 것

㉡ 미·중·일 등 주변국 및 서해 어민 등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 설득·홍보

- NLL의 역할 및 평화수역화의 정당성에 대한 국내·외적 지지 확보

56) 김태준, “NLL 분쟁과 남북한 해양신뢰구축 방안”, 국방연구, 49(1), 2006.6.

-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주변국과의 우호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해상의 특수성 문제(미·중·일 해군력 전개, 해양수송로 확보, 해양자원 확보 등 지정학적 사안)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
- 서해 5도 어민들이 北 어민들과의 어장공유로 인해, 또는 수도권 거주 국민들이 공동이용 등으로 겪을 안보불안부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불식
- 또한 NLL 평화수역화를 통해 실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들부터 추진

□ 단기적으로, 남북간 ‘실질적 공동이용’을 위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공동활동’을 통해 NLL 평화수역화에 대한 진일보한 수준 지향

- ①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담보하는 공동활동으로서 ‘서해 핫라인’ 개통
 - 국방장관-北 인민무력부장 및 합참의장-北 총참모장을 각각 연결하는 채널 뿐만 아니라 서해 NLL을 마주한 남북 양측 군 지휘간간 직통전화도 개설
 - 이는 2004.6.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도출된 「6.4 합의서」의 “남북은 서해상에서 쌍방 함정이 대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한다”는 조항을 계승·발전한 것
- ② 남북 모두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단위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
 - 2007년 ‘10.4 선언’ 및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은 제안된 핵심사업들이 북한의 現 능력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패키지로 합의됐기 때문이라는 평가⁵⁷⁾
 - 기준선으로서의 NLL을 명확히 전제하되, 남측뿐 아니라 북한도 실질적인 지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들을 세부 ‘단위사업화’해 추진
 - 이 과정에서 남북 민간선박의 공동어로수역 작업 후 복귀에 따르는 연료비 부담, 서해 5도 어민들의 반발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 협의·해결
- ③ 한강하구 공동개발 및 이용의 실제적 이행
 - ‘정전협정’상 중립수역인 한강하구의 ‘일정한 구역’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면 양측 모두 경제이익 및 군사긴장 해소라는 일거양득 효과

57) 정민정,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58(2), 2013.6.

- 우리 수도권의 연간 모래수요는 약 5천만 m^3 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 한강 하구에 이를 채울 수 있는 10억 m^3 수준의 모래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⁵⁸⁾
- 한강하구 개발 시 한국은 골재 부족난(難)도 해결, 준설효과로 인해 수면이 1m 가량 내려가기 때문에 홍수피해도 감소되는 효과
- 개발을 통해 한강하구 수심이 깊어지면 해상운송을 통해 물류비용도 절감
- ‘개성-서울-인천을 잇는 해상교통로’도 구축할 수 있어 남북 공히 이득

㉔ 불법조업 및 해상범죄 방지를 위한 남북 협력활동 확대

- 2016.10.7일 중국 불법어선(100톤급)이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4.5톤급)을 침몰시킨 사건 등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및 폭력행태가 빈번한 상황
- 중국어선들의 우리 해역 불법진입을 통한 어획물은 연간 최소 1천 억⁵⁹⁾ 수준,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 및 범죄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
- 남북이 이에 공동 대처할 시 ‘하나의 안보이익’을 추구하는 유대감 형성

㉕ ‘공동조업구역’의 실제적 설정을 통한 남북 어로협력 증진

- NLL 인근에 공동어로 및 공동어장 규정·이용, 해상에서의 무력충돌을 제거하고 남북 어선의 NLL 접근금지로 인한 중국어선의 영해침범 및 불법조업과 같은 주권 침탈행위도 방지⁶⁰⁾
- 원활한 조업을 통한 남북 어민들의 소득증대 효과, 특히 북한이 획득한 어획물의 판로를 보장함으로써 한국은 서해상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며 지속적인 남북경협의 틀을 제도적으로 유지
- 우리 정부는 NLL 인근 어민들에 대한 안전보장을 통해 군의 신뢰회복도 도모, NLL 침범을 단속·차단하기 위한 군사적 활동 소진도 예방 가능

㉖ 남북간 수색 및 구조활동 공동 실시

- 남북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상에서의 위급상황은 신속한 수색 및 구조활동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첩경이므로 시급한 협력 요망
- 특히 긴급을 요하는 양측 잠수함 사고발생 등 해군함정에 대한 수색·구조를 위해 남북 해군이 상호협력을 추구해야 하는 분야

58) 김태준, “NLL 분쟁과 남북한 해양신뢰구축 방안”, 국방연구, 49(1), 2006.6.

59) 국민일보 보도, “중국어선 불법어로 단속현장을 가다”, 2005.4.11.

60) 김태준·최종철, “북한 NLL 침범사례 분석과 대응방안”,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004.

㉗ 남북간 해운직항로 개설 및 선박운항의 실제적 이행

- 남북 양측은 2002년부터 해운협력 발전 및 선박운항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해 2005.8.10일 이미 「남북해운합의서」를 채택⁶¹⁾
- 인천-해주 통행허용 등 직항로 운항으로 비용절감 및 수송시간 단축 효과

㉘ 서해 NLL 인근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

- 남북간 공동어로, 공동이용구역 및 해운항로가 개발되면 이에 수반해 필연적으로 해양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유출된 유류, 유해물질, 어업활동으로 인한 폐그물, 폐어구, 양식부산물 등의 해양오염원에 대한 공동대처 제도화 추진
- 現 북한 상황으로는 해난사고 및 해양오염에 대한 신속한 방제조치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⁶²⁾ 한국의 방제협력이 필요할 것

□ 중장기적으로, 남북이 모두 ‘국제법적 일원이자 주체’로서 상호간 해양 협력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NLL 평화수역화 추진·유지

㉑ 한층 진전된 방안으로서의 남북 ‘합작어로회사’ 설립

- 서해상 공동어로의 확대 차원에서 北 ‘자유경제무역지대’상 합작기업 설립과 같은 개념으로 추진,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남북 해역에 관계없이 수산물이 풍부한 수역에서의 조업 가능
- 北 민간어선이 포획한 생선, 꽃게 등을 공식적 기업을 경유해 해상에서 직접 판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인적·물적 교류 증진

㉒ 국제적 프레임 안에서 ‘NLL 평화수역’ 및 협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남북간 해운협력을 위해 국제협약, 국제 상설·실무기구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 북한이 점차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가입하도록 유도
- ※ 동 협약은 인접국간 해양경계 획정, 생물·무생물 자원 보존·개발, 해양환경 보존, 과학적 탐사·개발 협력, 선박항해 보장 등 다양한 국제협력활동 포함
- 해상의 문제들에 대해 국제규범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여건 조성, 장기적으로 남북 해군 공동의 UN-평화유지활동(PKO) 참여도 구상

61) 전동진, “북방한계선(NLL) 논의의 전개와 향후 대응”, 통일전략, 8(3), 2008.12.

62) 이창위, “국제법상 서해 해양오염 방지·규제에 관한 연구”, Strategy 21, 5(1), 2002.

3. 군사회담의 체계화 (제3항)

□ 국방장관 및 北 인민무력부장 간 ‘최고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대해 포괄적 타결을 실행하고, 이를 정점으로 ‘군사공동위’ 및 분야별 ‘분과위’ 등 군사회담 정례화 추진

- ‘판문점선언’ 제2조제3항에 명시된대로 5월 중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신속히 협의·개최하되, 최상위급에서의 회담으로 즉시 연결되도록 대비
- ‘군사공동위’, ‘분과위’ 및 더 나아가서 ‘군축회의’, ‘군축위’ 등의 구성 문제는 앞서 살펴본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제3조, 「제2차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제2항 등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협의
 - 모든 군사회담 및 하위기구 가동이 수시로,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화

□ 곧 있을 군사회담 시 ‘판문점선언’의 합의사안을 되도록 모두 어젠다로 제의해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동력을 총체적으로 확보

- 주로 남북간 既합의된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의 5대 신뢰구축 방안을 존중·이행하는 차원에서 대화의 전개 유도 및 재개
 - (1)상호간 무력침략 금지, (2)평화적 분쟁해결, (3)현재의 각 경계선 및 관할구역 인정, (4)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5)군 인사·정보 교류 등
 - 선언문 제1조제6항의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대한 군사적 보장책도 포함시켜 함께 논의
- 단, 우리 군당국이 (1)고수해야 할 의제 제안 및 협의상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고, 북측의 회담 중단·회피에 대해 무작정 설득·관용이 아닌 (2)수용 또는 (3)차단해야 할 조치의 수준과 범위를 명확히 표명
 - 올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전까지는 ‘정전협정’을 위반 또는 무력화하지 않고 준수·이행할 것을 북한에 요구
 - 또한 회담 진행간 본고 제II장에서 살펴본 총 7차에 걸친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기존 합의안부터 북한이 인정하고 상호 이행할 수 있도록 도모

V

결론 및 정책제언

- 2018.4.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문」 제2조는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들에 일괄 합의함으로써 군사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및 평화적 환경조성에 기여
 - 양 정상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도모한 기존의 합의사안을 제대로 실현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 것
 - (1)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2)DMZ의 완전 비무장화, (3)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화, (4)군사적 보장, (5)군사회담 수시화에 명문으로서 이행력 담보
 - 과거 7차례에 걸친 역대정부의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를 비롯해 무수한 협의에도 진전되지 못했던 고질적 경협을 극복하고, 적대행위를 넘어 ‘적대관계’를 종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
 - 이러한 여건이 ‘첫관문’으로서의 군사회담까지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
- 이에 본 연구는 ‘판문점선언’ 제2조의 실제적 이행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MCB)’ 조치에 초점을 맞춰 비무장지대(DMZ),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군사회담의 3가지 핵심쟁점을 검토하고 그 방향성 제시
 - 이번 합의가 ‘10.4 선언’ 등 기존 합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역대정부의 한계를 극복해 반드시 ‘실천’까지 연결되게 할 수 있는 구체성에 초점
 - 추후 예정된 장성급 군사회담 등 군당국간 회담 시 준비자료로 활용 가능
- 국방부는 향후 ‘(1)역대 합의의 진전, (2)정상회담과 같은 포괄적 타결 및 (3)비핵화·평화체제 단계와 연결된 신중한 선후조치’라는 3가지 큰 틀의 방향에서 군사적 신뢰조치를 합의 및 실행해야 할 것
 - 이를 위해 실무단계(TF)에서는 합의목표를 세분화해 후속조치안을 마련하고 법적 구속력 확보도 추진, 협상과정간 안보태세는 더욱 확고히 할 것

• 참고문헌 •

- 국립생태원, 「2017 DMZ 일원 생태계 조사 보고서」, 2018.5.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12.
- _____,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주요 합의사항」, 2018.4.20.
- _____, 「남북군사회담 개최현황」, 2017.7.
- _____, 군비통제관실,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2007.1.2.
- _____, 「서해 해상경계선 관련 북한 주장의 부당성 및 우리의 입장」, 1999.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
- G. Ben-Dor, “Confidence Building and the Peace Process” in Barry Rubin, Joseph Giant, Moshe Ma’oz eds. *From War to Peace : Arab -Israeli Relations 1973~1993*,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4.
- J. E. Nolan, “Global Engagement : Cooperation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4.
- J. J. Hoist and K. A. Melander, “European Security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Survival*, 19(4), 1977.8.
- J. Macintosh,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in the Arms Control Process : A Canadian Perspective”,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1985.
- R. Darilek and J. Setear, “Arms Control Constraints for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RAND Corporation, 1990.
- R. D. Blackwill and S. F. Larrabee, “Conventional Arms Control and East-West Security”, Duke University Press, 1989.
- Y. Ben-Horin, R. Darilek, M. Jas, M. Lawrence and A. Platt, “Building Confidence and Security in Europe : Potential Role of Confidence and Security-Building Measures”, RAND Corporation, 1986.
- Yong-Sup Han, “Designing and Evacuating Conventional Arms Control Measures :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RAND Corporation, 1993.

Z. Lachowski, M. Sjogren, A. J. K. Bailes, J. Hart and S. N. Kile, "Tools for Building Confidence on the Korean Peninsula,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07.

권양주, "DMZ의 무장화와 충돌에 관한 고찰", 신안보연구, 190, 2017.6.

김강녕, "남북한 관계와 군비통제", 신지서원, 2008.

김병기, "서해상 북방한계선의 법적성격", 토지공법연구, 9, 2000.

김은옥, "한반도 신경계지도 구상", 국정과제 심화연구, 민주연구원, 2017.11.

김재철,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전략적 선택", 한국동북아논총, 14(3), 2009.

_____, "남북한 군사회담과 군사적 긴장완화 가능성", 서석사회과학논총, 4(1), 2011.

김재홍, "남북한간 군비통제 및 군축 제의 경과", 한반도 군비통제, 38, 2005.12.

_____,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방향", 조선대학교 군사발전연구, 7(2), 2013.12.

김진무, "역대 남북군사회담 평가와 대북협상 방향", 세종정책브리핑 2018-09, 세종연구소, 2018.4.5.

김태준, "NLL 분쟁과 남북한 해양신뢰구축 방안", 국방연구, 49(1), 2006.6.

김태준·최종철, "북한 NLL 침범사례 분석과 대응방안",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004.

남만권, "군비통제 이론과 실제", 한국국방연구원, 2004.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DMZ평화센터, "분단 70년 DMZ 남북 군사충돌 사례 DB 구축(1945~2015년) 제2차년도 보고서", 2016.

성기영,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 제6차 민주연구원 외교안보포럼 자료집, 2018.5.3.

손기웅,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새로운 도전", 국토, 2013.12.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한울아카데미, 2003.3.10.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도서출판 소화, 2001.

- 이성춘, “비무장지대 남북 군사력 변화와 평화적 공존을 위한 신뢰구축 방안”, 동국대·강원대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16.
- 이재민, “북방한계선(NLL) 관련 국제법적 문제 재검토”, 서울국제법연구, 15(1), 2008.
- 이창위, “국제법상 서해 해양오염 방지·규제에 관한 연구”, Strategy 21, 5(1), 2002.
- 장용운,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방안 모색 : 국제적 사례와 역사적 교훈을 중심으로”, 군사, 74, 2010.3.
- 전동진, “북방한계선(NLL) 논의의 전개와 향후 대응”, 통일전략, 8(3), 2008.12.
- 정경환, “NLL 문제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전략”, 통일전략, 8(3), 2008.12.
- 정민정, “북방 한계선(NLL)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58(2), 2013.6.
- 한용섭,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 이론, 선례, 정책대안”, 국가전략, 8(4), 2002.12.
- _____, “한반도의 평화와 군비통제”, 박영사, 2004.
- 한용섭·이규원, “군비통제 수준과 연계한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 평화연구, 18(1), 2010.4.
- 국민일보 보도, “중국어선 불법어로 단속현장을 가다”, 2005.4.11.
- 동아일보 보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2013.6.26.
- 매일경제 보도, “DMZ 평화공원 다시 추진한다”, 2018.5.2.
- 정책브리핑 보도, “군사벨트를 경제벨트로.. 왜 해주인가?”, 2007.10.10.
- 중앙일보 보도, “DMZ 빠진 접경 그린벨트.. 남북 합의로 제모양 갖추까”, 2018.5.1.
- _____, “오피니언, “남북관계는 더 나갔고, 비핵화는 덜 나가.. 양자 균형 중요”, 2018.4.30.

‘4. 27 판문점선언’ 제2조 이행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향